

# 무리한 사업비 절감 논란 화 자초

## 스노보드 경기장 치질 원인은

스노보드 경기 테스트이벤트 개최 불가능 우려가 커진 것은 유치 신청 당시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2018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총 사업비가 근본 이유다. 당초 205억원에서 598억원(승인액)으로 늘어난 스노보드 경기장 사업비가 담긴 2차 변경은 비교적 빨리 이뤄졌지만, 1차 조성 승인이 1년 넘게 걸리며 스노보드 경기장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도는 빙상 경기장과 중봉 알파인 경기장 등에 대한 실시설계 및 감정평가가 끝난 지난해 3월 초 당초보다 826억원 증액된 총 사업비(1차) 조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빙상 경기장에서만 오히려 775억원을 절감시킬 것을 요구했던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초야 기획재정부와 총 사업비 조정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의 775억원 절감안에 기대를 걸었던 기재부는 오히려 826억원이 늘어난 1차 조정안이 들어오자 수차례의 검토를 거쳐 644억원만 증액한 1차 조정을 지난 3월 말 승인했다.

도는 775억원 절감 요구에 따른 논란 등으로 총 사업비(1차) 승인이 늦어지자, 총 사업비 승인 없이 중봉 알파인 등 일부 경기장을 위한 조달 의뢰를 강행했다. 또 총 사업비 2차 조정 후 이뤄

## 보광 스노보드 경기장 건설 당초 계획



문체부, 사업비 제출 9개월 지나 기재부 협의 ... 승인 1년 걸려

3월 말 의뢰한 경기장 제설기 조달 절차도 최근에야 진행

져야 할 스노보드 경기장 제설기 조달 의뢰도 승인 전에 실시, 내년 2월로 예정된 테스트이벤트에 대비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 3월 말 '조달계약 의뢰 시 총 사업비 협의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며 도와 조달청에 관계자 제재를 요구했다. 기재부의 지적이 나오자 조달청은 스노보드 경기장에

대한 사업비 조정 승인 후 조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조달 절차는 지난 8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결국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 사업비 절감 논란의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775억원 절감 논란은, 설계비 등을 감안하면 실제 100억원대를 줄이는 규모에서 일단락됐다. 이 같은 사업비 절감 논란은 아무런 변화 없이 끝난

'경기 분산개최 및 경기장 재배치 부추기기'와도 맞물리며 경기장 조성 절차를 크게 지연시켰다.

앞으로도 경기장 사업비가 추가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대회 준비 차질이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경기장 조성사업비는 주로 설상 경기장에서 늘어나고 있다. 이는 설상 경기장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경험 부족, 국제경기연맹의 경기시설 보장 요구 등이 요인이다. 도는 경기장 조명 설치비 등이 담긴 총 사업비 3차 조정안을 최근 문체부에 제출했다. 이규호기자

## 도내 수출실적 '감소'·건설경기 '상승'

강원도의 올 1분기 수출실적은 감소한 반면, 건설경기는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동북지방통계청(청장 윤석은)이 발표한 '2015년 1분기 동북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도내 수출 실적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화학 공업품, 기타 금속 제품 등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차량 부품, 기타 일반 기계류 등의 수출은 부진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가스, 어류

증가로 192.1%나 늘었다.

1분기 건설업 수주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94.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문별로는 주택 등 건축이 46.6%, 철도·항만 등 토목공사가 224.5%로 대폭 증가했다.

발주처별로는 공공부문이 199.1%, 민간부문이 64.4% 늘었다.

도내 건설공사 수주율이 대폭 증가한 것은 올해부터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을 위한 경기장·진입도로와 원주~강

릉 복선전철 공사 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 물가는 0.2% 하락해 전국 평균 상승률(0.6%)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인구 순 이동은 1261명 순유출로 나타났다. 고용률은 52.6%로 전년 동 분기보다 1.3% 포인트 소폭 증가했다.

동북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지역별 건설수주통계는 주요 건설업체에서 수주한 금액을 공사지역 기준으로 구분해 집계한 결과"라며 "인구 감소는 대학 입학 및 구직활동 등의 영향으로 20대의 전출이 늘어나 생긴 결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안은복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철회하라”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열린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저지 전국종합건설업체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종합건설업체 관계자 3000여명이 국토교통부 조치에 항의, 입법예고 철회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관련기사4면 세종=안운수기자ays77@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철회” 종합건설업계 총궐기대회

# “중소사 수주난 악화... 제도 자체 폐지하라”

“국토부가 문제 키워... 생산체계 선진화기구 만들어야”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반대하는 종합건설업계가 결국 거리로 나왔다.

종합건설업계는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3000여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했다.

종합건설업계가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것은 많았지만 이날처럼 거리로 뛰쳐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종합건설업계가 느끼는 위기감이 절실하다는 점을 반영한다.

종합건설업계는 전문건설사에 발주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현행 3

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면 10억원 미만 공공공사 물량을 전문건설사에 빼앗기게 된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정내삼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대회를 통해 “종합건설업계가 집단행동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잘못된 정책은 개선을 요구해야 마땅하다며 소규모복합공사 확대 저지는 물론 제도 자체가 폐지되도록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구 건설 전라남도회장은 “국토부가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추진 시 중

소업계 간 업역분쟁이 심화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박종웅 건설 서울사회장도 “소규모 복합공사를 확대하면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의 수주난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종합건설업계가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합심하여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업계는 또 이날 행사에서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저지를 위한 결의문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시행규칙 입법예고 철회 △일방적 불통행정 중단 △건설산업 발전 정책 집중 등의 요구 사항을 담았다.

또한 건설업 등록증 반납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탄원서 제출 등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종합건설업계는 대규모 집회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국토부가 말 바꾸기를 하며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일을 줄속으로 추진해 문제를 키웠다”며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철회한 뒤 정부와 학계, 연구계 등 전문가와 종합 및 전문업계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생산체계 선진화기구를 만들어 제대로 논의하고 연구하는 것이 건설산업 전문가들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정석기자 jskim@



종합건설업계, 국토부에 지역 중소기업체 탄원서

# 대표단 “문제·갈등만 유발”... 국토부 “시간 갖고 의견 수렴”

강한 흠먼지 바람과 피약벌 속에서도 3000여명의 건설인들은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철회에 한 목소리를 냈다.

13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 3주차장에서 열린 소규모 복합공사 계약 저지! 전국종합건설업계 총궐기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건설인들의 “일방적인 시행규칙 개악, 국토부는 각성하라”, “부실공사 조장하는 국토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 등의 함성으로 2시간 내내 뜨거웠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국토교통부 향의 방문이었다. 정내삼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박종용 건협 서울시회장 등 9명의 대표단은 지역 중소기업체가 작성한 상사 4개 분량의 연명 탄원서를 국토부 측에 전달하고 김정희 건설경제 과장 등과 1시간가량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부회장은 “1947년 협회 창립 이래 70여년 만에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다”며 “회원사들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탄원서에 담았으니 국토부가 균형잡힌 시각으로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철회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종용 건협 서울시회장도 “간호사가 의사 역할을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종합



정내삼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종합건설업계 대표단이 연명 탄원서를 국토부 측에 전달하고 있다.

세종=안윤수기자 ays77@

건설사와 전문건설사는 등록기준과 역할이 다르다”며 입법예고를 철저히 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정희 과장은 “입법예고에 대한 우려로 이렇게 집회까지 열게 된 데 대해 죄송스런 마음”이라며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칸막이를 트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은 제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영구 건협 전남도회장은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통해 발주자의 선택권을 넓혀준다고 하지만 이는 각종 로비 등 오히려 문제와 갈등을 키우는 꼴”이라며 비판했다.

동석한 김광섭 국토부 사무관이 등록기준뿐만 아니라 입찰조건 등을 통해 종합-전문 간 역할을 나눌 수 있다고 해명하지, 대표단은 일제히 “현실을 모른다”

며 반발했다.

대표단이 입법예고 철회 후 원점 재검토를 재차 요구하자 김정희 과장은 “시간을 갖고 충분히 양측(종합-전문)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과장은 “입법예고 기간인 이달 20일이 지나 곧바로 공포하는 것은 아니고 아직 검토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김태형기자 kth@

## ‘경제살리기’ 빼고는 재정지출 확 조인다

### ·전방위 재정개혁 ‘속도’

정부는 13일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방위적 재정개혁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재정 건전성 강화와 경제 살리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전방위적 재정개혁의 목표다.

정부는 재정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을 서민과 중소기업, 취약계층, 청년 고용 등 꼭 필요한 곳에 중점적으로 재투자하고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 교부세 등 지방재정개혁, 지방 교육재정 효율화, 정부 연구개발(R&D) 혁신, 복지재정 효율화, 문화지출 효율화,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재정사업 성과 평가 체계 개편,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10대 분야의 재정개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재원 마련 방안 없으면 지출 못 늘린다 정부는 당분간 재정으로 경제 활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강력한 개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상반기에는 재정 조기집행에 주력하고 하반기에는 경기, 세수를 점검해 필요하면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모든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유지  
중·취약계층·청년고용 분야 등 중점적으로 재투자

중기적으로는 2015~2019년까지 5년 동안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재정준칙을 범제화하는 등 페이그(Pay-Go) 원칙을 확립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페이그 원칙은 지출 계획을 짤 때 원 조만 계획도 함께 마련해야 하는 제도로 재정준칙은 지출 증가율, 국가 채무 등에 대한 제약을 두는 것이다.

재정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달까지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처음으로 발표하고 5년마다 이뤄진 장기재정전망을 2년마다 내놓아 재정위험 요인을 관리하기로 했다.

재정 지출은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면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삶의 질, 안전과 관련된 복지, 문화,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은 확대한다. 특히 서민, 중소기업, 취약계층, 청년 고용 등 꼭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수입은 비과세·감면 정비, 세외 수입 확충,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입 기반

을 확충하기로 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증세에 대한 부정적 인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지방재정 손본다 재정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정부의 개혁 강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내년 예산 편성에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 수의 총량을 규제하는 등 불필요하거나 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통폐합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R&D에 이어 임차·계약 분야에 대해서도 불합법 지급 예산 근절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재정사업은 진입 단계에서부터 유사·중복, 지원 필요성 등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집행 단계에서는 현장조사제를 도입하

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는 재정도 개혁한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 기준을 주요 중심으로 개편해 불합리성을 없앨 계획이다. 지방 교육청에 지급되는 교육교부금의 경우 배분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해 학생들이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이 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중앙 정부와 지방의 대립이 있었던 누리과정은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해 교육을 불모로 한 논란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 없어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전략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재정의 양대 축인 수입과 지출 중 수입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은 “기본적인 방향은 잘 잡았으나 수입 확충 방안이 담기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세수를 더 이상 늘리기 어렵다”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자가 47~48%가 되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세금을 더 부담하도록 하는 세수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언제 어디서나  
즐거움 만남!**

건설경제 지면신문을  
PC/스마트폰/태블릿으로

구독료 : 월 25,000원  
신문구독자 : 월 5,000원  
<http://dp.cnews.co.kr>

**건설경제!**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재정의 기본은 수입과 지출인데 수입이 빠져 있다”면서 “중세 등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없고 공약가계부 부분도 빠져 있다”고 밝혔다.

이준엽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추가적인 내용보다는 기존 정책을 잘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방 교부세, R&D 혁신 등 이전에 발표했던 대책이 대부분이고 이들 대책의 구체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경남기자 knp@



# ‘갯간’ 줄어가는 SOC 투자 民資·공공기관 비중 늘린다

2015 국가재정 전략회의  
신규 SOC사업 추진 엄격  
예타前 ‘종합평가제’ 도입  
대안·재무성 분석 등 강화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에 대한 민간 자본과 공공기관의 역할 및 비중이 확대된다. 또 신규 SOC 사업에 대해 비용-편익(B/C) 분석과 계층화 분석법(AHP) 이외에 대안 분석을 강화하고 재무성 분석을 시행하는 종합평가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내년 예산안과 2015~2019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 ▶관련기사3면

정부는 우선 어려운 재정여건과 복지 지출 증가 등을 감안해 SOC 투자는 민간 자본과 공공기관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전격 확대했던 SOC 예산을 정상화하고 민자 유치와 공공기관의 자원 분담을 통

해 부족한 SOC 투자 재원을 보완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내놓은 새로운 민간투자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간이 리스크를 분담하는 위험분담형(BTO-rs)과 손익공유형(BTO-a) 방식을 신규 민자사업에 적용해 민간의 유동성을 SOC 투자로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강력한 구조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확보한 공공기관의 투자 여력도 SOC 사업에 투입된다. 고속도로 건설 때 한국도로공사의 참여비율을 확대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이 공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활주로 등 공익성이 강한 시설의 경우 이들 기관의 자원 분담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신규 SOC 사업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하기 전 대안 분석과 재무성 분석 등을 실시하는 종합평가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종합평가제는 신규 SOC 사업과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도 사업비 절감이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올해 제

도의 틀을 구체화한 뒤 내년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신기술 개발에 따른 SOC 건설비와 운영비 절감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기존 지하 20m 이상인 고심도 대신 지하 5~6m 공간을 활용하는 저심도 경전철 건설 기술 등을 신규 사업에 적용해 사업비를 3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기능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0㎡ 초과 분양주택 공급을 폐지하고 임대주택관리를 민간에 개방한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농업기반시설 설계·감리,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 등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철도공사는 렌터카와 국내외 여행, 온라인 쇼핑물 등 민간과 중복되거나 경쟁하는 분야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9월 내년 예산안과 2015~2019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경남기자 knp@



**•중장기 SOC 투자 전략**

**SOC투자재원 다양화 · 투자 효율화**



**•재정투자 보안을 위한 SOC투자재원 다변화**  
 새로운 민자방식 활용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공기업 투자여력 활용 및 역할 강화

**•기존 시설 효율화 · 신규사업 평가 강화**  
 B/C, AHP 이외 대안분석 강화,  
 재무성 분석 등 종합평가제 도입

**•신기술 활용으로 SOC건설비·운영비 절감**

예:(저심도 경전철 건설) 도로하부 저심도(지하 5~6m) 공간에 경전철 건설이 가능한 기술을 활용, 기존 고심도(20m 이상) 대비 사업비 30% 절감

**‘자금줄’은 다양하게... 신규사업은 깐깐하게**

정부가 13일 ‘2015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밝힌 2015~2019 국가재정 운용계획상 중장기 SOC 투자 전략의 핵심은 투자 재원을 다양화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올해 경기 부양과 안전투자 확대에 따라 SOC 투자를 늘렸지만 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데다 복지지출 등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SOC 투자 재원

**민간 풍부한 유동성 적극 활용  
 공공기관 투자 첨병 역할 확대  
 신규SOC 사업비 절감에 ‘초점’**

을 다시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을 SOC 투자로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투자 여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의 SOC 투자 유인책은 위험분담형(BTO-rs)과 손익공유형(BTO-a) 등 새로 도입한 민자사업 방식이 맡는다.

민간에 모든 리스크를 떠넘기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대신 정부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이들 방식을 통해 ‘중위험 중수익’ 구조가 가능해지면서 민간의 SOC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투자 여력이 있는 공공기관도 SOC 투자의 첨병으로 나선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투자 여력을 활용해 정부와 공공기관 간

재원 분담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SOC 공급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속도로와 철도, 공항 등의 신설 과정에서 각 공공기관의 재원 분담 비율을 상향 조정해 SOC 투자를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전략이다.

SOC 재정투자 축소가 기정사실화하면서 신규 SOC 사업의 추진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비용-편익(B/C) 분석, 계층화 분석법(AHP)은 물론 대안 분석과 재무성 분석을 실시하는 종합평가제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신규 SOC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제는 사업비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 사업비 절감이 가능한 대안이 있을 경우 그 대안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신기술 활용을 통해 SOC 건설비와 운영비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저심도 경전철 건설 기술, 스마트 톨링 등이 대표적인 신기술로 꼽힌다.

스마트 톨링은 무정차, 다차로 기반의 고속 주행 환경에서 자동 요금 지불이 가능한 차세대 하이패스 시스템으로 본선과 같은 속도로 주행하고 차로 변경도 가능해 요금소 지정체가 사라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SOC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도 재정개혁의 한 축이다. 정부는 민간 시장이 성숙해 공공기관의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SOC 사업의 경우 철수하거나 축소해 민간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박경남기자